PICC(2010) 제·개정규정에 대한 법적 기준*  

심 종 석**

목차

I. 머리말
II. 일반규정
III. 재약해제의 사유
IV. 위법성
V. 조건
VI. 재약해제
VII. 요약 및 결론


I. 머리말

‘국제불문재해예방에 관한 UN 협약’(CISG)은 국가 내지 범계 간 상이한 사후적·경제적 및 법률적 제도를 고려하여, 국제적인 통일법적 시각에서 국제상거래를 조정하기 위해 성립된 국제협약으로서, 모집지국 UN 창설 이래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가장 성공한 일법체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1) 영향에 비추어 CISG는 제46차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의 주도하에 공표된 ‘국제불문재해에 관한 통일법’(ULIS)과 ‘국제불문재해예방에 관한 통일법’(ULE)에 기초를 두었는데, 이들 소위 협약

---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4S1A3A2A03064547).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외국어학과 박수성(경영학박사·법학박사)
1) 본고 제목시점기준(CISG의 재약관Contracting states)은 총 83개국에 이르고 있다 (www.unidroit.org). 본고에서 인용한 원자는 본고 제출시점기준(2015. 06. 05)이 고, 기술적인상 프로그램명(http://)은 생략한다.
2 경영상학

그협약(Hague Convention)은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법제 간 이해가 절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에 당초 의도한 통일법적 실효성을 잃보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협약은 국제무역법위치주의(UNCITRAL)에 의해 전면히 저해받고 다수국가에 수용될 수 없게, 보완적이고 거쳐 비로소 CISG에 훼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PICC는 자체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 아닌, 다만 국제상사계약의 일반원칙을 적용한 법적 기준으로서, 제정취지에 비추어 갈수록 특화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상사계약 당사자의 이해를 절제하기 제한·조정하기 위한 법적용수alex의 필요에 부응하고, 제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의미와 성질의 이해를 달리하여 신속·편리한 국제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용수alex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요컨대 PICC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원칙으로서 본다면 아니면 계약당사자에게는 계약의 합법적용·대한민국에의 윤용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보장하고 있다. 2) 나아가 그 기능의 목적에

2) www.unidroit.org/about-unidroit/overview
3) 심종식,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상 계약비례의 사례에 관한 법적 기

본고는 이상과 같은 PICC(2010)에 이어 ‘PICC’의 기능과 목적 내지 역할 등을 중심히하여 현재 PICC상 조문체제의 변동을 포함한 재·개정규정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본고는 ‘전과 통일’한 규정과 신설규정으로서 제11장(마수의 채권자(제1장)와 채무자(제2장)) 정립의 그 범위와 내용이 증권과 동일하거나 또는 방대하다는 이유에서 이후 본고에 후속되는 연구주제로 삼고자 한다.

한편 본고의 논제에 기하여 PICC에 관한 학적 기준의 해제가 시대적 으로 따뜻한 감이 없이 없다고 생각되나, 다른 한편 그간 선행연구의 정적이 다소간 미미하다고 보아 이를 논제의 범위에 일부로 제한하게 추측하려는 것도 후속연구 일조의 시각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4) 요심의 사용에 있어 ‘제정’이라 함은 기술법학적 신설규정을 포함하여 조문의 내용과 제재를 담당한 규정으로 해석한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제·개정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전문</td>
<td>전파 동일</td>
<td></td>
</tr>
<tr>
<td>제1장</td>
<td>일반규정</td>
<td>전파 동일</td>
</tr>
<tr>
<td>제2장</td>
<td>제1절 계약의 성립 전파 동일</td>
<td></td>
</tr>
<tr>
<td></td>
<td>제2절 대리인의 권한</td>
<td></td>
</tr>
<tr>
<td>제3장</td>
<td>제1절 일반규정 개정) 제3.1.1조~제3.1.4조</td>
<td></td>
</tr>
<tr>
<td></td>
<td>제2절 계약체결의 사유 개정) 제3.2.1조~제3.2.17조</td>
<td></td>
</tr>
<tr>
<td></td>
<td>제3절 위반성 개정) 제3.3.1조~제3.3.2조</td>
<td></td>
</tr>
<tr>
<td>제4장</td>
<td>해석</td>
<td>전파 동일</td>
</tr>
<tr>
<td>제5장</td>
<td>제1절 계약의 내용 전파 동일</td>
<td></td>
</tr>
<tr>
<td></td>
<td>제2절 제3차 권리</td>
<td></td>
</tr>
<tr>
<td></td>
<td>제3절 조건 개정) 제5.1.1조~제5.3.5조</td>
<td></td>
</tr>
<tr>
<td>제6장</td>
<td>제1절 이행 일반 전파 동일</td>
<td></td>
</tr>
<tr>
<td></td>
<td>제2절 장애</td>
<td></td>
</tr>
<tr>
<td>제7장</td>
<td>제1절 불이행일반 전파 동일</td>
<td></td>
</tr>
<tr>
<td></td>
<td>제2절 이행종부결</td>
<td></td>
</tr>
<tr>
<td></td>
<td>제3절 계약체결 개정) 제7.3.1조~제7.3.6조 개정) 제7.3.7조</td>
<td></td>
</tr>
<tr>
<td></td>
<td>제4절 손해배상 전파 동일</td>
<td></td>
</tr>
<tr>
<td>제8장</td>
<td>상세</td>
<td>전파 동일</td>
</tr>
<tr>
<td>제9장</td>
<td>제1절 쇼원양도 전파 동일</td>
<td></td>
</tr>
<tr>
<td></td>
<td>제2절 쇼이전</td>
<td></td>
</tr>
<tr>
<td></td>
<td>제3절 계약양도</td>
<td></td>
</tr>
<tr>
<td>제10장</td>
<td>쇼소기관</td>
<td>전파 동일</td>
</tr>
<tr>
<td>제11장</td>
<td>제1절 다수의 쇼무자 개정) 제11.1.1조~제11.1.13조</td>
<td></td>
</tr>
<tr>
<td></td>
<td>제2절 다수의 쇼무자</td>
<td>제11.2.1조~제11.2.4조</td>
</tr>
</tbody>
</table>
II. 일반규정

I. 적용범위

CISG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내용에 있어 재권한에 사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즉 CISG는 계약의 유효성(validity)에 관련하는 일부 사항이 필요하다고 한다(제4조). 따라서 본조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은, 홍보 및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능력(mental capacity), 착오(mistake)의 결과, 사기(fraud), 협박(intimidation) 등에 관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ICC는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가 관련하여 적용범위의 요건으로서 무능력(lack of capacity)만을 제외하고(제 3.1.1조) 이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이 있다. 이 경우 무능력을 배제하고 있는 이유는 계약당사자의 특정한 신분에 내재된 특별한 특성(특정발생 계약은 자원자산 계약의 경우)이 국내법 상 매우 다양한 방식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 기초한다. 또한 이론적 기업의 조약·입원 또는 통상의 전환, 파트너십 또는 그 밖의 실제는 각각의 법률과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범위로 복잡한 범위 기존 내지 규칙에 분할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2. 단순한외의 유효성

PICC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단순한 합의에 의하여 체결·변경 또는 종료되며, 이에 더 이상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제3.1.2조). 본조는 일부 국내법상 존재하지 않는 복권의 제한요건에 구애받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게끔 분명한 합의를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다.

11) PICC, 제3.2.1조(제한范围) : "(1) 본법은 제3자허의 계약에 의한 또는 이에 관련하여 의한 계약(대리인의 계약외 기타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하거나 체결한 경우 제3자와 본인 간의 복권제한을 발생시키는 대리인의 계약을 규제한다. (2) 본법은 퇴임 또는 파업의 제3자 간의 복권제한을 규제한다. (3) 본법은 명의외 부여한 대리인의 계약이나 종종가리 또는 사법상에 의한 명의외 계약의 근본을 규제하지 아니한다."

12) PICC, 제3.2.5조(특정범위 또는 불법행위) : "(1) 대리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는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와 제3자 간에 복권제한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2) 본법은 퇴임 또는 대리인의 계약 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하는 경우를 규제하지 아니한다."

13) PICC, 제3.1.2조(단순합외의 유효성) : "계약은 당사자 간의 단순한 합의에 의한 체결, 변경 또는 종료이며 이 이상의 요건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본상 보통범 체계에서 약인(consideration)은 계약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뿐만 아니라 계약의 유 효성이나 그 집행에 관한 법적 기준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제상관법에 있어 이러한 요구는 계약당사자와 계약이행에 관한 의무에 비추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있으며 상례이다. 이러한 이유로 CISG에서는 당해 상관법을 수용하여 약인의 요구를 배제하고 있는데[제29조, (1)]. 이는 본조를 통해 계약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기한 단순항의를 존중하여 계약체결의 전 과정에서 그 확실히 내지 단순성을 제고하여 이로부터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적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 PICC(제3.1.2조) 또한 이러한 CISG의 취지를 제수하여 단순항의의 유효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약인은 종론이고 법적능 상 약인과 유사한 원인(cause)에 관한 요건 또한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원인에 기한 불법성(illegality)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단면의 법적효과까지도 일정 배제하고 있다.

3. 원시적 이행불능

PICC는 계약체결직전에서 타당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나아가 법적 분쟁에 관련된 자산을 처분할 자격이 없는 단순한 사산 또는 그 유 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1.3조]. 이들때로 다수의 법적행위에서의 불법이행이 계약체결직전에서 이미 부재하였을 경우 당해 계약무효로 취급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본조는 이를 유효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타당 또는 불법적 이행불능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유효한 상황에서 불법능(non-performance, 제 7.1.1조제7.1.7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14]

[15] PICC, 제3.1.3조(원시적 이행불능) : "(1) 당사의 의무이행이 계약체결 시에 이미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 당사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에 관계없이 지불한 침관.GetCurrentSentence()이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4. 강행규정의 성격

PICC에서 강행규정은, 사기(fraud), 강박(threat), 현저한 불균형(gross disparity), 불법성(Ilegality) 등이다(제3.1.4조.17) 본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규정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여기의 신의칙 위반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일반 일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이로부터 자유로이 행동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를 철회하기 위하여 일방이 사기, 강박 및 현저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는 배제할 수 없다. 반면에 단순한 방법을 원칙에 이행불능 또는 외모로 무효화하는 것은 보장된다. 환언하라 이 경우 본조는 강행적이지 않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약인 또는 원인과 같은 국내법의 특별한 요건을 위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이 원칙예행불능인 경우 그 효력이 없거나 일방에 의한 유효가 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다.18)

---
17) PICC, 제3.1.4조(강행규정의 성격) : "보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기, 강박, 현저한 불균형, 불법성에 관한 규정은 강행적이지 않다."
18) UNIDROIT, op. cit., p.98.
III. 계약해제의 사유

1. 착오

1) 착오의 점의

착오(mistake)는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사실 또는 적응법에 관련한 실수로 취급하는 것으로서(제3.2.1조), 이 경우 사실과 관련한 착오는 법과 관련한 착오와 동일시된다. 본조는 착오가 계약체결시점에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적 상태에 관련된 가정과 연관성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적 요소 내지 연관성을 확정하고 있는 목적은 PICC에서 확대의 구제조치에 관한 착오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불이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에 두고 있다. 실제로 정확적인 착오의 경우 필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금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장애의 관련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만약 일반이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에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착오에 대한 불이행이나 본조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에 일반이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당해 계약에서 그것의 전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나중에 이 행을 가정하는 경우 이러한 착오는 불이행의 규정에 의해 다루어진다.

2) 관련된 착오

계약당사자 일반은 1) 타당이 동일한 실수를 하였거나, 2) 실수를 유발

---
19) 본문은 논체에 기하여, 실증적, 철학논문의 내용과 구체적으로는 쟁점된다. 이에 본
20) PICC, 제3.2.1조(착오의 정의) : "착오와 혼란 계약체결 시에 존재한 사실이나 법에
하져 하겠거나 또는 당해 실수를 일으키거나 할 수밖에 없었고, iii) 착오함 당사자에게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공정적일 뿐이 상계 배수에 모순이 되는 경우. iv) 타방이 체계적에서 당해 계약을 신뢰하여 합리적이므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3.2.2조, (1)). 그러나 계약내용에 비추어 착오에 중대한 파실이 가임되어 있거나, 착오의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의 위험을 인지하였거나 계약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에 놓여 있다면 당해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제3.2.2조, (2)). 분조는 계약체결목적으로 원메시 착오에 대한 필요조 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착오항(제3.2.2조, (1))은 착오가 고려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경우와 착오의 사 이의 당사자에 대한 조 건을, 착오항(제3.2.2조, (2))은 착오자에 대한 조건을 다루고 있는 조항으 로 구분된다. 23) 각 조항의 발췌 기준을 분별하면 다음과 같다.

중대한 착오는 그것의 비중과 중요성이 따라 적법적이고도 주관적인 표준을 벗어하여 평가된다. 공 제약체결사항에서 명확한 실제상황이 고려된 경우 실수한 당사자와 같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의 판단기준에 의한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또는 중대한 상황으로서 다른 조건에서 당해 착오가 가임되었다면 모처 그에 합하여 중대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침소항의 서론은 착오가 가임될 수 있는 계약 의 불수칙한 요소라고 보는 이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탐색적인 접근방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당 당해 사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다.

23) 피조2조(편의 착오):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합리적인 자가 전반 금속의 실정의 상태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게수한 내용으로 계약하였거나 계약을 전혀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중대한 계약체 결 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상대방 동일한 착오를하였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고 또한 착오당사자와 취하는 방법에 놓아진 것이 합리적인 상정의 공정거래 의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또는 (3) 계약체결 사실상 계약이 이미 계약를 신뢰하여 행위하지 아니한 경우 (2) 그러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그가 착오를 빼앗기게 된 것이 그의 중대한 파실 때문인 경우 또는 (4) 당방 착 오가 착오당사자가 그러한 착오의 위험을 인지하였거나, 계약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에 있겠다된 경우."
작을 두고 있다.\(^{24}\)

원칙 적절한 입력은 단방이 전조항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계약을 해체할 수 있다. 곧 i)의 조건은 당사자가 동일한 착오에 처해 있어야 하며, ii)는 착오한 자의 실수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어야 한다. 이는 실수가 상대방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정한 의사표시의 인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부주의하거나 또는 행위에 의해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나아가 정복 그 자체가 나와도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수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 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제3.2.5조). iii)의 경우 조건은 상대방이 착오한 자의 실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불량없는 경우로서 따라서 이를 공정거래의 합리적인 상환할 착오한 자의 실수로 취급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곧 상대방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그 당사자와 동일한 구부러의 합리적인 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함을 조건에 두고 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착오한 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를 알라주어야만 되지만 그로서 합리적인 자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한다. iv)의 조건은 착오한 자 이외의 당사자가 계약의 해체시점까지 당해 계약에 의존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조항은 착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곧 실수한 자의 중대한 부주의가 개입된 경우와, 착오한 자가 착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위험이 착오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인 경우를 고려한 조항이다. 오전에 입력은 특정사항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당해 계약을 계절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시작에서 이러한 위험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개입되어 있음을 추정하는 것마저도 가능하다. 본조항은 이러한 경우 자신의 착오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자격이 없을음을 명시하고 있다.

3) 표시 또는 전달의 착오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전달 시에 발생하는 착오는 당해 의사표시 표명함

\(^{24}\) UNIDROIT, op. cit., pp.100-103.
사의 실수로 취급되는데(제3.2.3조), 본조는 의사표지 또는 전달상의 오류를 의사표지하거나 전달하는 자의 통상적인 실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규정이다. 관련된 조항(제3.2.2조)에 관한 실태로서 만약 표지 또는 전달의 실수가 충분한 경우 특히 그것이 틀림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부터 이것이 당해 요청 또는 수신인이 당해 요청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 이 경우에 PICC는 피청약자가(수령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또는 전달된 청약서를 수락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청약의 조항이 충족된다면 특히 피청약자가 청약자(발송인)에게 그러한 실수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의 상관행에 위배되는 경우 청약자와 당해 청약서의 효력에 대한 제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물이행에 대한 구제조치

청약외 당사자는 자신이 의존한 상황이 물이행을 위한 구제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수 있다면 청약을 이유로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3.2.4조). 따라서 본조는 청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구제와 물이행에 관한 구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충돌이 발생한 경우 물이행에 관한 구제가 우선 적용된다. 그 배경은 물이행에 관한 구제가 보다 합리적 뿐만 아니라 청약제도는 강행적 해결책보다는 보다 신속하게도 이행할 수 있는 이유에 두고 있다. 물이행에 관한 구제와 물이행에 관한 구제와 충돌은 이를 구제조치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용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물이행에 대한 구제조치의 종류는 실제적이며 없으나 막론할 수 있다.

25) PICC, 제3.2.3조(표시 또는 전달상의 작오) : "의사표지에 발생한 오류는 당해 의사표지로서 사의 작오로 본다.
26) UNIDROIT, op. cit., pp.103-104.
27) PICC, 제3.2.4조(물이행에 대한 구제조치) : "물이행에 대한 구제조치는 그가 취득하는 바로 그 사상이 물이행에 기한 구제를 부여하는 데에는 또는 부여할 수 있었던 제는 작오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의,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배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해도 법정기에 경과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응상 이의한 경우에도 본조는 작용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구체조치는 일관 배제되고 있음은 유의하여야 한다.

2. 사기 및 강박

사기(fraud)에 기한 일반의 계약해제는 특정한 유형의 작용에 대한 해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제3.2.5조).29) 곧 사기는 상대방에 의하여 아기된 작용의 특별한 경우로 취급될 수 있는데, 이로해도 작용과 같이 사기는 명시적인 목적이 아닌 환자를 포기하거나 또는 장해를 은폐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와 작용의 차이점은 사기의 자의 사조상 또는 알리지 않은 것의 성격과 그 목적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기와 같은 사기 체적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 사기에 대한 사실이 허위일시 또는 은닉이 계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아 여하하 사기가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기의 법적 성격은 관련된 작용에 유한한 추가요건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제하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인정한다.30)

현원 PICC는 강박(threat)에 기한 계약해제를 수용하고 있는데(제3.2.6조), 이 경우 강박은 그 자체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극단적(threatening) 심각해야(serious) 한다.31) 곧 강박을 받은 자는 할지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29) PICC, 제3.2.5조(사기) : “상대방의 사기적 표시(업무 그 밖의 현재가 포함한다)로 인한, 합리적 상임적 공정주의 기준에 의한, 상대방이 고의하였거나 말사실의 사기적 통보가 환자 계약을 해제하게 될 당시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1) PICC, 제3.2.6조(강박) : "상황에 비추어 다른 합리적 대단이 있을 정도로 공박하고 심각한 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독위 또는 무죄의 강박행위 자세가 위법하거나 그러한 독위 또는 무죄를 계약해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경우에 강박은 부당하다."
3. 현저한 불균형 및 제3자와 추인

1)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gross disparity)에 관한 PICC 규정(3.2.7조)은 계약당사자가 상호간 의무에 상당한 불균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큰 당사자 입장에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익이 변증되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경우 파도한 이익은 반드시 계약의 체결시점에 존재하고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불균형이라 함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의 판단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부터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은 공정거래의 시각에서 왜곡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익한 경우에서도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당해 요건의 충족여부는 계약으로부터 비롯된 모

32) PICC, 3.2.7조(현저한 불균형) : "(1) 계약이나 특정 계약조건이 계약체결 시 상대방에게 파도한 이익을 부당하게 주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의 청구를 해제하거나 계약조건이 한정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자간의 통상상태, 경제적 균형이나 신뢰성 회복을 위한 필요성, 공정성 혹은 교제내용의 결여를 상쇄받이 이승한 사실 그리고 (3) 계약의 성
적적 목적. (2)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 법원은 합리적인 상황에 공정적개의 기준에 부합되어계약이나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3) 또한 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발생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도 계약이나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를 수행한 후 신속하게 또한 상

jącej가 그러한 통지를 신속하게 당하기 전에 자신의 그러한 요청을 할 것임을 상세하게 체지하여 한다. 이 경우 제3.10조 (3)의 규정이 준용된다."
본 조는 이 같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혐의의 지위, 제약의 성질과 목적, 그 밖의 요건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자체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혐의의 지위에 관한 재정성 여부는 상대방에 대한 의 존성, 경제적 고민, 필요성의 비박성, 경솔, 무지, 무경험 또는 혐의의 부주의 등을 요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타방에 대한 의 존도는 시장조건과 그 자체에 의한 우체적 형상력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 같은 시각은 제작의 내용과 목적은 당해 계약으로부터의 혐의를 기대하고 있는 일방이 타방의 혐의적 형상지위를 남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왜적한 이익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열단한다. 따라서 이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는 오로지 계약의 성질과 목적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통증의 사업 또는 상거래에 있어 남지 종용되는 경영베어 부도는 부 차적이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조에 따라 제작을 해제할 자격이 있는 일방은 범위의 개입을 통해 하러적인 상황에 발생하는 범위내에서 조건을 요청할 수 있는데, 법적적용이 이는 PICC에서 부자할 수 있는 특별적인 규정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제3자

제3자(third persons)에 의한 계약체제의 요건을 대두하고 있는 조문(제3.2.8조)은 실무상 허용하게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본조는 제3자가 혐의상태에 관여 또는 간접하고 있어 이로부터 계

35) PICC, 제3.2.8조(제3자) : "(1) 사기나 강박, 정실한 불공정 또는 당사자의 착오가 제3자에게서 비공정한 이해나 사기나 강박, 정실한 불공정 또는 당사자의 착오가 성립제3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로서 그러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속되는 경우 그러한 제3자의 행위 또는 행정을 상대방 자신의 행
약제제의 사유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 우선 본조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사기, 강박, 행위한 불균형 또는 일방의 책임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적법한 배상의무로서 취급하기에 충분한 제3자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또는 책임을 끌어일으키지 않고 제3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는 불법이 없는 경우를 고려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일방은 제3자가 타당한 행위의 결과로 인한 책임 내지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에 있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 명이 상황이 성립이든 추정이든 불용하고, 궁 문체의 타당이 제3자 의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과 부관하게 일방은 제3자의 행위 또는 인위에 대한 책임을 타당에게 못할 수 있다.

한편 타당이 귀책사유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일방이 사기를 당하거나 위험을 받거나 또는 부당하게 행방을 잃은 경우 그로인해 불행하고 타당 이 그러한 제3자의 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었다면, 타당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기, 강박 및 허위의 불균형에 영향을 받은 일방은 타당이 제3자의 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타당이 계약에 의 침해 이전에 계약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당해 계약 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은 유죄하야 할 사항이다. 36

3) 주인

주인(confirmation)에 관한 규정(32.9조)과 관련하여 37 본조상 목적 적적 주인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이불때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보유한

위 또는 인지로 다루어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2) 사기나 강박 또는 허위의 불균형 이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그러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대 사기나 강박 또는 불균형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 도 해제할 권리가 있기에 정책이 이에 업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7) PICC, 제3.2.9조”주인” : “계약이외의 당사자가 해제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제시된 후에 명시적 또는 목시적으로 계약을 추청하는 경우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타방의 특이성에 기초하여 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끝 추인은 타방이 그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또는 발생의 조치가 다를 것임에 대해 수임의 요청이 있거나, 또한 발생의 조치가 다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용인될 수 있다. 따라서 추인
은 제약의 제재권을 보유한 일방이 제약제재의 권리를 유보하고 제약적으
로 당해 제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된다.

4. 제약제재권의 요건

1) 제약제재권의 상실

제약제재권의 상실에 관한 조문(제3.2.10조)에 비추어, 적합한 일방은
타방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제약을 이행할 의향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약을 제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타
방의 이익에 다른 태의는 친족의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양당사자간
과 제약을 유지함에 있어 사기, 강박 등 협자있는 혀는 일체 제외된다.

38) 이 경우 타
방의 이익에 대한 태의는 친족의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양당사자간
과 제약을 유지함에 있어 사기, 강박 등 협자있는 혀는 일체 제외된다.
이

38) PICC, 제3.2.10조(제재권의 상실) : "(1) 당사자가 제약을 이유로 제약을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결을 가리키는 당사자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 제약을
이행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경우 제약은 제재권을 가리키는 당사자가 이해한 대로
제재될 것으로 본다. 상대방은 제재권을 가리키는 당사자가 제약을 이행할 의향을 알리
고 협자있는 혀가 제재결을 일체적으로 인식하여 행위하게 된 경우 그
의 그러한 의향을 받아서 이해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의향표시가 이해있는
대에 제재권은 소멸하고 그 전에 행해진 제재의 폐지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39) UNIDROIT, ibid., pp.112-113.
2) 계약해제의 통지의 기한

계약해제는 통지(nachfristen)에 의해 실현되는데(제3.2.11조) thereof 본조는 계약해제를 위한 통지의 형식 또는 그 내용에 관한 목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지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의 외
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통지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해제
라는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생각되
나, 실질적으로 그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계약해제의 통지는 토달주의에 의한다. 41)

한편 계약해제 통지는 관련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42)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곧 적호 또는
사기를 당한 일방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
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상당한 자의 무지, 경솔, 무경험에서 발생하
는 현저한 불공정한 경우에도 다름이 아니다. 이 경우 상당한 자의 의존성,
경제적 곤란 또는 경제적 위험 및 납품의 경우 그 기간은 위험을 받게
나 피해야 할 경우 자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기산된다.

3) 계약의 일부해제의 소급효

계약해제의 근거가 계약의 일부 내용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
해 내용만 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본문의 사유에 기하여 다른 계약
을 비롯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조각된다(제3.2.13조).
또한 계약해제의 효과는 다른 계약을 지지하기에 불합리한 상황이 아
나라면 영향을 미친 일부 내용만 한정된다. 한편 계약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어(제3.2.14조) 또한 일부 계약해제의 경우 본조는 당해 계약이 해
제된 일부만 적용된다. 그러나 계약내용의 전부에 계약해제의 효과가
미치더라도 주로 체결된 계약의 일부를 그 밖의 조

40) PICC, 제3.2.11조(해제통지) : “계약해제일은 상해받에 대한 통지로써 행한다.”
41) UNIDROIT, ibid., p.114.
42) 본문에서 ‘reasonable’에는 ‘기한의 환련성’을 상당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통제 또는 상
태 등에 불리해서는 할지여부'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학과는 다르게 여전히 존속한다.43) 다만 이러한 조항의 유 효성 여부는 해당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44)

4)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권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당사자의 권리에 기하여(제3.2.15조), 일반은 계약 또는 해제된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타당으로부터 공급된 것에 대한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45) 반환은 통상 실패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금전으로의 대치도 가능하다. 이 경우 금전은 실패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당해 금전은 통상 이행가치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말리 실패반환이 절전하지 않을 경우 할인된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만 제한요건은 실패이행이 불합리한 노력과 유효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반환비용은 이행수행자에게 귀속한다.

한편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거래에서 계약해제의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일반은 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하였을 동일한 처지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있고, 이상의 규정은 일반이 타


44) PICC, 제3.2.12조(기간제한) : "(1) 계약해체의 종료는 해체의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알면서부터 또는 관련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관련 사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약 사항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3.2.7조에서 당사자가 계약 해체 조건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불이행은 상대방의 통지 기간을 초과하여 동 계약사건을 없葶하는 계약에 계약자. 제3.2.13조(일반해제) : "특정한 계약조건에 의하여 해지사유가 있는 때, 해제는 동 계약조건에만하여 그 효력을 가리며, 다만 계약의 내용을 바꾸거나 관리의 근거를 부담한 감속을 손서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그 효력이 없다." 제3.2.14조(계약의 소급효) : "해제가 소급하여 발효된다."

45) PICC, 제3.2.15조(일반해제) : "(1) 계약해체시 일반은 자신이 계약 또는 해제된 계약의 일부에 의해 공급한 것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동 시에 계약 또는 해제된 계약의 일부에 의하여 받은 것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심판을 받아서 계약을 할당한 것으로서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거나 거절하지 않는 경우 할인된 경우 균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이행을 불문한 자는 심판을 받아서의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가 발달 또는 기한의 경우 균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4) 반환 이행을 보류하거나 유 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할인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발에 대하여 제공된 의사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발생한다(제3.2.16조 제3.2.17조). 46, 47

IV. 위법성

1. 강행규정을 침해하는 계약

1) 강행규정의 성격

계약이 PICC의 강행규정(제1.4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내 및 국제 또는 추적가격의 변동가격에 상관없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그 효과는 당해 강행규정에 명시된 효과로 취급한다. 만약 강행규정이 제약에 대한 침해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계약当事자는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구체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경우 무엇이 합리적인 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침해권의 목적, 규정의 권위, 규정이 존재하는 보호대상자의 범위, 침해된 규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여타한의 제재, 침해의 심각성, 일방 또는 양당사자간의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 계약의 이행이 그러한 침해를 수반하지 여부, 계약당사자의 합리적 인 기대 등에 대한 고려가 바탕되어야 한다(제3.3.1조). 48

47) PICC, 제3.2.16조(손해배상) : "계약当事에서의 상당성이 그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있었는 일방은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에 의한 대가로 상당한 손해배상에 책임을 진다." 제3.2.17조(일반적 의사결정) : "본문의 규정은 일방이 당사자에 대하여 제공한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적용한다.
48) PICC, 제3.3.1조(강행규정을 침해하는 계약) : "(1) 계약이 제1.4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내 또는 추적가격의 변동가격에 상관없이 강행규정을 침해하는 경우 계약에 대한 침해의 효과는 그것이 침해하는 경우 강행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효과가 있다. (2) 강행규정이 계약에 대한 침해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당해 계약에서의 구체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3) 무엇이 합리적인 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a) 침해권의 목적, (b) 규정이 존재하는 보호대상자의 범위, (c) 침해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여타한의 제재, (d) 당해 침해의 심각성, (e)
본조는 제약당사자에게 역할의, 오류와 특별한 제한없이 계약을 시집
할 수 있어야 함을 보장하고 있을때에 그럴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당해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
는 국제사법의 관련 규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특정한 법적 규정이든
또는 공공정책의 일반적인이든 간에 강행규정을 침해하는 계약이란 적용
된다. 이 경우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해
분쟁이 국내 법원 또는 중재심판부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마찬가지로 본조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이 강행규
정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PICC가 당해 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49)

2) 강행규정에 기한 침해의 효과

반약 강행규정이 계약에 대한 침해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는 당해 상황 및 계약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구체조치를
(parcel) 할 수 있다. 또한 본조는 그 적용방식이 있어서도 최대한 신속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범위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강행규정의 침해에
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당사자가 당해 사안에 따라 이행을 포함하여
유효한 계약에 의거 주장할 수 있는 종사적인 구체조치 또는 계약을 무
효로 석유한 권리, 이에 정책의 정당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체와 같
은 그 밖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조치는 특히 침해의 결과
로서 당해 계약의 취해로부터만 무효화되는 경우 그 유효성이 부각된다.

3) 강행규정의 범위

본조에서 고려하여야 또 다른 요건은 취해된 강행규정이 일반적으로
동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병주에 해당하는 자
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를해면 불확요건은 후자의 경우로

49) UNIDROIT, op. cit. pp.124-133.
보아 이 경우 만약 특례를 받지 않은 자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됨 경우 당해 계약에 의거 손해에 대한 특례 구제조치를 고려 또는 거래처에 의하여 하는 것은 할리게이라고 볼 것이다.

4) 강행규정에 의한 계약사항과 그 내용

특정활동 내지 행위를 금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강행규정은 본상 행사 또는 행정상 체제를 다루고 있을 때 상례이다. 이러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계약상 권리 및 구제조치의 위반효과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그 내용을 통제한다. 달리 당해 규정이 그러한 효과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면 행사 또는 행정상 체제의 존재 및 성격은 위반되여진 규정의 목적, 내용, 보호대상자의 범위,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중요성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의 존재 및 성격은 계약상 권리 및 구제조치에 대한 위반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원인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한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취해 필요성과 관련, 계약에서 규정하는 있는 내용상 법령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 그 어떠한 구제조치도 당사자에게 의하여하지 않는 것이 할리지 않을 수 있다면 당해 유효성은 인정될 것이다. 또한 다른 법적 또는 상업적·문화적 이해일방이 철회사상을 할리지로 알 수 없었거나 또는 계약 또는 일부 조항의 집행력에 대하여 할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후후 그러한 기대를 무효화하기 위해 행당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계약 또는 일부 조항에 이로 인한 가능한 구제조치를 당당하게 허용하는 것이 할리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 적용상 이 같은 일례의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와 그 자치에 의존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특단의 고려가 요구된다.

2. 원상회복

강행규정을 위반한 결과로서 계약상 원상회복(restitution)은 상품에 따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3.3.2조).50) 그렇지만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비추어 어떠한 원상회복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
의 이행기준에서 이에 제공될 것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조(제3.3.1조)에 따라 결정된다. 나머가 제조에도 불구하고 만약
강행규정이 당해 분체에 대하여 입금하고 있지 않다면 본조에 따라 강행
규정을 첨부한 계약에로서 이행된 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상회복이 허용이 합리적인지
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계약상 구조조건이 당해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본조항(제3.3.1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3.3.2조 (1)).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상의 구조조건의 원상회복의 구조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에 경우에 따
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합법 원상회복이 허용
되는 경우 그 기준으로서 합법 원상회복이 본조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면 이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PICC의 제2.1조에 비추어 반환전에 관한
조문의 적용을 받게 된다. 50) 그러나 당해 기준은 범위권에 관한 조항(제
3.2.1조 (1))에서 계약해제에 대한 언급이 당해 계약이 강행규정 체결의
결과로서 미효과는 경우와 그 일부만 무효화 되었을 경우 다만 참조기
준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에 그친다는 사실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V. 조건

1. 조건의 내용

1) 조건의 범위

계약상 의무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소위 조건

50) PICC, 제3.3.2조(원상회복) : "(1) 제3.3.1조의 따라 강행규정을 첨부한 계약에 의
겨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된다. (2) 무단
의 합법적인지 결정함에 있어 제3.3.1조 (3)에 언급된 기준이 계약이 합리적인지
한다. (3)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경우 제3.2.1조에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conditions)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약성 의무에 기하여 병원의 사천이 발생하는 경우(불확실한 조건)에만 연료하거나 또는 그 사천이 발생한 경우(해제 조건)에 종료된다. 결국 본조에 기하여 제약당사자는 경력의 불확실한 사천의 발생여부에 따라 제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에 부수하여 또 다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본조에서는 이러한 허의의 규정을 조건이라 칭하고 있는데, 본조에서 다루고 있는 조건은 제약이 유효한 자를 결정하는 조건들과 제약상 의무를 결정하는 조건을 공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조의 적용은 이하의 규정(제5.3.3조-5.3.4조)에 따라 제약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도 병원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들 조건은 자연적 사건 또는 제3자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을 종합하며, 본조는 다만 제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발생하는 조건만을 다루고 있다. 한편 변호사 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건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건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현급된다. 52)

2) 조건의 개념

통상 조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중체연 조건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본조에서 의미하는 조건은

52) PICC, 제5.3.1조(조건의 유형) : "제약 또는 계약상 의무는 상대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또는 계약상 의무로 인해 사천이 발생하는 경우(불확실한 조건)에만 연료하거나 또는 그 사천이 발생한 경우(해제 조건)에 종료된다."

53) PICC, 제5.3.2조(조건의 효과) : "당사자가 달리 허의한 계류를 제외하고, (1) 계약 또는 계약상 의무는 경제 조건이 없어야 깨어 보험이 발생한다. (2) 계약 또는 계약상 의무는 해제 조건이 없어야 깨어 보험을 발생한다. (3) 일방당사자가 신의 및 공정거래의 의무 또는 혐의의 의무의 반대 조건의 의정을 허위로 체결할 수 있다. (4) 일방당사자가 신의 및 공정거래의 의무 또는 혐의의 의무의 반대 조건의 의정을 허위로 체결할 수 없다."
발달된 점 일부 제약에서는 일반의 이행이 타법의 이행에 의존하고 있다
고 규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조건이 아니며, 다만 이것은 제약에
의한 양당사자의 의무를 단순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제약당
사자는 제약상 발생하는 의무가 유효하거나 또는 소멸되는 특정일자를 지
정할 수 있다. 통상 이러한 규정들은 조항(terms)으로 정하여지거나 그것이
본조에 해당하는 조건(conditions)은 아니다.50

3) 조건의 종결

제약상 의무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발생에 연관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조건은 당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는 본조에서 통
통을한 조건, 즉 경지조건(conditions precedent)에 해당한다. 달리 제약상
의무는 항후 특정조건의 발생 시에 종료되도록 할당할 수 있는데 이는
확정적인 조건으로서 허제조건(conditions subsequent)에 해당한다. 한편
확정적 조건에 대하여 할당하는 대신에 제약당사자는 그들 중 일부 또는
상당이 특정한 행위하에서 제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다고 할당할 수
있다. 예컨대 제약당사자가 사용한 방법의 용어에도 불구하고 경지조건으
로 정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은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조건에
해당된다. 예컨대 모든 필요한 특정증명사항을 채울, 주식거래소에서의 거
래허용증, 수출입허가증, 승인서, 순합증명증 등이 이와 관련된 것들
은 그 발행이 불확실한 사건이라고 본 수 있기 때문에 공히 경지조건으
로 취급할 수 있다. 달리 일반의 대리 또는 보증의 정확성, 일부 특정행
위를 이행하거나 급여하여야 하는 약속, 관계당사자의 의하여 미남의 세금
이 없을을 증명하는 세금증명서의 제출 등과 같은 그 밖의 것은 사실
상 관계당사자가 당해 거래의 공식적인 해제(약도)전에 이행하기로 함의
한 의무들로 보아 이러한 것은 앞서의 불확실한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합당에 본조에서의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55

54) UNIDROIT, ibid., pp.168-176.
2. 조건의 효과

계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편 계약 또는 계약상 의무는 정지조건의 이행 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해제조건의 이행 시에 종료된다(제5.3.2조). 따라서 본조의 외자 계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의 이행은 장해에 대하여만 효과를 가지며 여하한 소유하여 적응되지 않는다. 요건이나 본조에 따라 정지조건의 경우 계약 또는 계약상 의무는 자동적으로 장해 불확실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효력하고 해제조건의 경우 장해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에 종료된다.

3. 조건의 충돌

일반적 신뢰 및 공정거래의 의무 또는 협력의 의무에 반하여 조건의 이행을 막는 경우 일반적 바탕에 당해 조건에 대한 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고, 미완거지로 조건의 이행을 초래하는 경우 조건에 대한 이행을 원용할 수 없다(제5.3.3조). 본조는 조건의 충돌과 관련하여 신의 및 공정 거래(제1.7조), 불일치한 행동(제1.8조), 계약당사자 간 협력(제5.1.3조) 등에 대한 일반원칙의 복합적 적용에 관한 것을 이에 편입하여 다루고 있는 연관규정으로서 기능한다.50377

4. 그 밖의 내용

1) 권리보전의무

50) Bemull, M. J., Ibid.
57) PICC, 제1.7조(신의 및 공정거래): "(1) 계약당사자는 극단적에서 신의의 공정거래 제2. 방한해야 할 것이다. (2) 계약당사자는 이 의무를 배제하거나 저해할 수 없다." 제1.8조(불일치한 행동): "당사는 자신으로 인해의 상해가 이면 행동 하여 이익 또는 상해당당사자의 침해를 협력적으로 상쇄하여 행해한 때는 상해 방의 그러한 이익에 관한 것이 하여 그에 의한 그의 행위가 되지 행해할 수 있다." 제5.1.3조(계약 당사자 간 협력): "각 당사자는 상해당이 그 의무를 행정하는데 협력할 것이 협력
처로서 기대되는 때는 그의 협력해야 한다."
조건의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방은 신의 및 공정거래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할 의무에 반하여 타방이 당해 조건의 이행 시 그의 권리를 철폐 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함할 수 없다(제5.3.4조). 본조는 당해 조건이 이행되는 시기 그 이전에 이행할 행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조는 조건의 충돌에 대한 당당하는 행위를 다투고 있는 경우를 아니며, 이 경우 행위 는 조건(제5.3.3조)에 의하여 다루어진다.58) 통상 조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신의 및 공정거래에 따라 일반적으로(제 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기서 당해 이행으로부터 해택을 받는 자는(특히 정지조건의 경우) 보호를 받을 만한 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조건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일방의 조건이 타 방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조는 그러한 결과를 차용하기보다 그러한 개입행동을 미행에 방지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본조는 체약당사자간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당해 조건의 이행으로부터 해택을 받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

2) 해체조건 이행 시의 반환

해체조건에 해당하는 제약이 당해 조건의 이행으로 중요되었다면, 일방 은 제약에 의거 자신의 의무를 경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그 런다면 당해 그러한 규칙 하에서 일방은 자신이 수행한 것을 다정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판단 방향하여야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체조건의 이행은 통상 미래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해체된 일시 이행계약에 대한 첨부 회복(제7.3.6조) 및 일시기간동안 이행하여야 할 계약에 대한 첨부회복(제 7.3.7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제5.3.5조 (1)).59) 이들 조문들은

58) UNIDROIT, Ibid., pp.176-178.
VI. 계약해제

1. 계약해제의 요건

1) 계약해제권

계약당사자에 의한(미해당당사자)은 타방(불이행당사자)이 계약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불이행(fundamental non-performance)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제7.3.1조 (1)], 이 경우 중대한 불이행이 결정기준은, i)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바탕하였는데지 여부, ii) 이행되지 않은 의무를 임제해 준수하는 것이 계약상 불가능한지 여부, iii) 불이행이 고의적이지 또는 무도한 것인지 여부, iv) 불이행이 타방의 장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v) 계약해제의 경우 타방이 자신의 이행이나 그 준비의 결과로 행사에 반하는 소실을 겪게 되는 자의 이익을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제7.3.1조 (2)].

나아가 인지지연의 경우 타당한 추가기간의 지정여부에 따라[제7.1.5조 2)]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0) PICC, 제7.1.5조(추가기간의 지정) : “(1) 불이행이 있는 경우 피해당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행이 계약에 의한 추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 당해 추가기간 동안 피해당사는 대응하는 자의 의무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한 수 없다. 피해당자가 불이행당사 자로부터 추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을 통지받거나 또는 추가기간이 만료 되기까지 이행이 정지 되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당자는 본장에서 협의하는 모
있다(제7.3.1조 (3)).

본조는 다량이 물이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방향으로 하여금 전용이 형을 치수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또는 다량의 물이형에 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이형이 민책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두고 있다. 나머지 당해 물이형이 종래환자를 결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질하에 다음과 같다.

우선 1)은 물이형이 매우 중대해서 일반가 계약체결시점에서 기대할 권 리가 있는 것을 설령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다량이 그러한 결과를 예전지치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예전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한다. 이는 물이형의 실질적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임의적인 이형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계약사의 의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ii)은 물이형이 과의적이거나 부주의한 것이나에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물이형이 과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면 이로부터의 계약체결시선의 심의직(제1.7조)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되고 있다. 1.4의 적용여부는 당해 물이형이 다량.
의 항후 이행을 실효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간단하다. 예컨대 타방이 당해 이행을 분할로 하는 경우 종합의 이행에서 이루어진 하자가 나머지 이행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 하여 일방은 종합 이행에서의 하자가 그 자체로서 종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타방이 계약에 따라 이행 을 준비하였거나 이행을 제한한 일방의 상황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조건 으로서 이 경우 불이행이 중대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일방이 불이행의 손 해를 입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무를 두고 있다. 종합 불이행은 이행을 준비하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이행을 준비 한 후에 발생하는 것보다 보다 중대하게 취급된다. 이 경우 준비되거나 또는 제공된 이행이 타방에게 어떠한 영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이행이 거절되거나 또는 일방에게 탐탁되어야 하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63)

2) 계약해제의 통지

계약해제의 통지에 관한 규정(제7.3.2조)에서 종지보전은 일방이 타방 의 이행을 수도할지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하간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방이 타방에게 손해가 되도록 이행의 가치를 고리자히 줄이고 내려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임을 두고 있다. 64)

기존이 정상한 이행과 관련, 이행을 위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방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행조차전을 행사할 수 있다. 곧 일방은 타방이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판단하고 결정 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을 모랄 수 있다. 이 경우 일방은 당해 이행 63) UNIDROIT, op. cit., pp.249-252. 64) PICC, 제7.3.2조(해제의 통지) : “1) 계약을 해제할 당사자의 권리타바금당사자가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행사된다. (2) 당사 이행이 지연되어 중단되었거나 또는 다툼 계약내용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해제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이 불일치한 이행이 재정의되었거나 그러한 이행을 알 게 되었거나 알 수밖에 없는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바람직하게 행하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점기에 이루어지는 지장 지치본 후 이에 상당한 결정을 취할 수 있다 [제7.3.2조 (2)]. 65 한편 본조는 타방이 입방에게 지연된 이행을 승낙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외에, 타방이 계약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제3자로부터 알게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입방은 신의 및 공정거래(제1.7조)에 기초하여 당해 지역이행을 승낙하고 실지 않다음 타방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입방은 잘못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여하히 부당하여야 한다. 다만, 한편 계약을 해제하려는 입방은 불이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한 내에 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한의 결정기준은 사실의 문제로 취급된다.

2. 불이행의 예전과 적절한 이행의 보장

1) 불이행의 예전

타방의 이행가가 도래하기 전에 그의 중대한 불이행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입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3.3조). 66 본조에서 예상되는 불이행은 이행이 중절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이행과 중일다. 이 경우 처한 요건은 당해 불이행은 확실하고 또한 중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에는 통상 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는 경우가 예로 들 수 있다.

2) 적절한 이행의 보장

상대에 타방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것이임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입방은 그 적절한 이행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내용에는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이행의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입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3.4조). 67, 68

65) Vogenaue, S., et al., op. cit.
66) PICC, 제7.3.3조(예상되는 불이행) : "사방의 당사자가 이행가 전에 그 당사자에 의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타방당사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는 타방이 납기일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이행할 의사가 없지만 이행할 것이거나 이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조(제 7.3.3항) 처분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일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취지를 두고 있다. 적정한 이행보장이 있음 때까지 이행을 유보할 수 있는 일방의 권익을 관리, 바방에 의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일방은 대방으로부터 이행을 확약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한 보장이 어떤 것이냐는 당해 상황에 달려있다. 곧 상대방이 이행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제3자에 의한 보장을 담보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로써도 불구하고 만약 이행에 대한 적정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을음은 물론이다.

3. 계약해제의 효과

계약해제에 관한 일반적 효과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경쟁의 이행과 수령이무로부터 면이나게 한다(제7.3.4조). 그렇지만 계약해제의 결과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다음이외 존재한다. 이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해결을 위한 계약상의 규정이나 계약해제 이후에 기능하는 여타의 계약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8) PICC, 제7.3.4조(약기이행의 적정한 보장) : "보상당사자에 의하여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당사자는 만기이행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이 성립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9) UNIDROIT, op. cit., pp.255-256.
4. 구성권과 반환권

1) 일시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에 관한 구성권

일시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체제 시 일방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것이 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것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이에 결부하여야 한다. 또한 허물인원이 가동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는 범 이전이 할지라도 할지에 상관없이 전부환은 전부 반환될 경우 굳이로 조건할 수 있으나, 통중의 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로 조건할 필요는 없다. 환원 손해배상금은 수령된 이행을 유지하거나 보존 하는데 할리적으로 요구하는 경비에 한한다(제7.3.6조). 72)

본조에서는 일시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에 대하여만 인급하고 있다. 일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의 공통적인 사례는 당해 상거래에 있어 전부적인 대상이 특정한 시점에 일방 이전되어야 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많다. 이럴때면 생략체제에서 일방은 제공받은 이행에 대하여 통상 금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환원법인이 본합금 금으로도 메도인허리 이행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본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반환은 통상 당초 통중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할리적으로 여취치 못할 경우에는 수령한 이행가치의 금액으로 환상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는 대개 현물은 의한 반환이 불합리할 노력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74)

위의 본조에 관하여 본조는 물품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의 가치를 배상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경우 일방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

72) UNIDROIT, op. cit., pp.257-257.
73) PICC, 제7.3.6조(일시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에 관한 구성권) : "(1) 일시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것이 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것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이에 결부하여야 한다. (2) 허물인원이 가동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할리적으로 굳이로 조건이 가능하다. (3) 이행의 수령자는 통중의 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파 바탕사자로 인한 것인 경우 금전으로 조건할 필요가 없다. (4) 해상금은 수령된 이행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는데 할리적으로 요구하는 경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74) Zimmermann, R., op. cit.
있다. 즉 분쟁사항[제3.6조 (2), (3)]은 일방이 수량품을 파손하거나 약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다소일이 적용된다. 이들처럼 그러한 파손 또는 약화의 위험관계가 특정 위험이 이행을 전제하는 일방에게 달려있거나 또는 약화 또는 파손이 일방의 부실에 기인한 경우 타방은 이에 상당한 가치의 배상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방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이행에 내재된 하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방이 수량한 이행에 대한 가치의 배상책임은 약화나 또는 파손이 그러한 이행을 제구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배제되지 않는다. 결국 이행가치를 정부하기 위한 타방의 의무는 약화 또는 파손이 제약에 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것이 제약을 배제한 후에 약화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불이행에 대한 통상적인 규칙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제약에 후 타방은 자서가 수량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 줄 의무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무에 대한 여론의 불이행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제7.4.1조)이 그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75) 다만 불이행이 불가항력(제7.1.7조)에 기하여 면역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것이다.76) 77) 78) 79)}

77) PICC, 제7.4.1조(손해배상청구권): "불이행은 피약당자가에게 피약적이거나 또는 그 밖의 구제방안 없게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통상적이지 못한 해양에서 볼이
설의 범위에 공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불가항력): "(1) 피약당자의 의무불이행이 그의 부과를 받지 않는 상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체결 시에 그러한 사항을 고려하기로 된 것이 또는 상의의 경과를 취하거나 그 구성한 것이 일론의 해석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는 경우 그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
한다. (2) 장해가 단지 한방만의 경우 면목은 상자가 계약의 이행에 미친 효과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3) 불가항력사상의 상업관계의 그하한 장
해 및 그 상지가 그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묻기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사상의 그러한 장해를 알거나 알지 않았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정구가 상인당계 로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행당자는 그러한 부담당이 기하는 손
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4) 분쟁의 이행을 못한 규정도 당사자의 계약체결이나 이 행부류로, 자가주의할 규정은 당사자에 대한 이자분구권의 행사로 배제하지 아니한다."
합의 유의함 사항으로서 본조는 계약당사자 외에 계약에 따라 제3자가 가능할 수 있는 당해 물품에 대한 역할인의 관리에 대하여는 단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매수인의 채권자, 파산상태에 있는 매수인의 수령자 또는 선의의 매수인 동의 관계상 물품의 반환을 제3자가 반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것이다.

2) 일정기간 동안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에 관한 반환권

일정기간 동안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에 이행된 계약이 불이행될 수 있는 경우 계약해제가 해명한 이후의 기간 동안에만 유지될 수 있다 [제7.3.7조, (1)]. 반면 반환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전조(제7.3.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3.7조, (2)]. 일정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계약에는 전반적으로 서비스계약뿐 아니라 장비 임대, 유통관련 계약, 아웃소싱, 프랜차이징, 라이센스 및 무역대리점 계약 등이 있다. 본조는 물품이 별도 인도되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말에서도 이행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제는 장개에 효과가 나타나는 구체조의인 기타에 당해 이행을 해명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결국 이 경우 반환권은 계약해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조는 순매매상정구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파거 이행에 대하여 미지급한 금액은 여전히 청구대상이 된다. 한편 본조는 계약이 특정기간 동안에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파거에 이루어진 이행에 대한 반환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본조에 의한 반환의 이행여부에 대한 청구제도 보다는 전조(제7.3.6조)가 적용된다.

III. 요약 및 결론

본조는 PICC의 기능과 목적 내지 역할 등을 증시하여 PICC 제7개정

규정을 중심으로 그 법적 기준을 제시한 논문이다. 제1개정 조문의 구성
체계와 범위는 앞서 토의 장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PICC 제약의 유호성(제3항1호)에 관한 일반규정(제1항)은 차례로 적
용법례(제3항1호)과 단산합의의 유호성(제3항2호), 원시적 이행불능(제
3항3호)과 강행규정의 성격(제3항4호) 등을 다루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무능력의 범례, 위인과 원인을 배제한 단산합의의 유호성, 원시적 이행불
능의 불이행 수용, 신의칙에 기한 사건, 정책, 전격적 불공정, 불법성 등
의 강행규정으로의 수용 등이다.
계약해제의 사유(제2항)는 죄의 정의 및 사실의 판정, 결정적인 시기(제
3항1호)라고 심각한 죄와 죄의 자 및 죄로한 자 이외의 당사자에 대
한 조건 그리고 표시 또는 전달의 죄오(제3항2호-제3항3호), 불이행에 대
한 구제조치(제3항4호), 사기, 강박, 전격적 불공정 및 제3항의 주인(제
3항4호-제3항9호)을 포함하여 계약해제에의 사실과 죄와 기한(제
3항10호-제3항12호) 그리고 계약의 일부해제와 소급효(제3항13호-제
3항14호), 반환권과 손해배상 및 일반적인 의사표시(제3항15호-제3항17호)
을 다루고 있다.
신설규정으로서 위법성(제3항)은 강행규정을 침해할 수 있는 계약, 강
행규정의 침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침해의 효과, 특별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에 따라 결정되는 침해의 효과 및 합리적인 것에 대한 결정
기준(제3항1호)과, 원상회복의 합리적인 기준(제3항2호)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조건(제3항, 제3항)에 있어서는 조건의 개념과 유형, 해소할 수
있는 조건, 타당의 외적에 의존하고 있는 조건(제5항1호), 조건의 효과와
중물(제5항2호-제5항3호), 권리보전의 의무와 해제조건의 이행 시의 반환
(제5항4호-제5항5호) 등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이행(제7항)에 관한 계약해제(제3항)에 관해서는 불이행
의 면죄, 중대한 불이행 및 그 결정기준, 통지 후의 해제 등의 계약해제
의 기준(제7항1호-제7항2호), 예상되는 불이행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7항3호-제7항4호), 계약해제의 효과와 구성원 및 반환권(제7항5호-제
7항7호) 등을 제1개정규정을 통한 명시하고 있다.
참고 문헌

심종석, 「국제붕대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2014.
오석용, "국제계약규범상 제약관계에 있어서의 법적구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CISG, PICC 및 PBCL을 중심으로", 「한영법학」 제30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www.unidroit.org](http://www.unidroit.org)
[www.unidroit.org/about-unidroit/overview](http://www.unidroit.org/about-unidroit/overview)
【Abstract】


Shim, Chong Seok

The decided and amended provisions of PICC are following; Firstly general provisions(sec. 1) of validity(chap. 3) are consist of art. 3.1.1(matters not covered), art. 3.1.2(matters not covered; no need for consideration and cause, all contracts consensual), art. 3.1.3(initial impossibility; performance impossible from the outset, lack of legal title or power), art. 3.1.4(mandatory character of the provisions). Secondly ground for avoidance(sec. 2) are include art. 3.2.1(definition of mistake: mistake of fact and law, decisive time), art. 3.2.2(relevant mistake; serious mistake, conditions concerning the party other than the mistake party, conditions concerning the mistake party), art. 3.2.3(error in expression or transmission; relevant mistake, mistakes on the part of the receiver), art. 3.2.4(remedies for non-performance), art. 3.2.5(fraud; fraud and mistake, notion of fraud), art. 3.2.6(threat; threat must be imminent and serious, unjustified threat, threat affecting reputation or economic interests) and furthermore gross disparity, third persons, loss of right to avoid, notice of avoidance, time limits, partial avoidance, retroactive effect of avoidance, restitution; right of parties to restitution on avoidance, restitution in kind not possible or appropriate, the allocation of risk, compensation for expenses, benefits(art. 3.2.7-3.2.15) and art. 3.2.16(damages: damages if ground for avoidance known to the other party, the measure of damages), art. 3.2.6(threat; threat must be imminent and
serious, unjustified threat, threat affecting reputation or economic interests), art. 3.2.17(unilateral declarations). Fourthly illegality(sec. 3) are include two arts. One is art. 3.3.1(contraction infringing mandatory rules; scope of the section, only mandatory rules applicable under art. 1.4 relevant, ways in which a contract may infringe mandatory rules, effect of infringement expressly prescribed by the mandatory rule infringed; effects of infringement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what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criteria for determining what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he other is art. 3.3.2(restitution). Fifthly conditions(sec. 3 of chap. 5) are following; types of condition, effect of conditions, interference with conditions, duty to preserve rights, restitution in case of fulfillment of a resolutive condition(art 5.3.1-5.3.5). Finally termination(sec. 3 of chap. 7) are consist of art. 7.3.1(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ermination even if non-performance is excused,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dependent on fundamental non-performance, circumstances of significance in determining whether non-performance is fundamental, termination after nachfrist) and notice of termination, anticipatory non-performance, adequate assurance of due performance, effects of termination in general, restitution with respect to contracts to be performed at one time, restitution with respect to contracts to be performed over a period of time and so on.

Key word : PICC, validity, general provisions, ground for avoidance, illegality, conditions, termination.

주제어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계약의 유효성, 일반규정, 계약 해제의 사유, 위법성, 조건, 계약해제.